

“영포 게이트 본질은 내부 권력투쟁”

‘정보통’ 박지원 원내대표 진상조사 진두지휘 조사특위 구성 압박...재보선 앞둔 여권 긴장

‘정보통’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영포 게이트(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진상조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 낸 만큼 전·현정권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전반에 걸친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보력이 가늠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만큼 이번 ‘영포 게이트’사건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 대책회의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사건을 ‘영포 게이트’로 명명하고 당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6일에도 국무총리실을 향의 방문한 진상조사 위원들에게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당내 회의를 잇달아 갖고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논의하는 등 ‘영포 게이트’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한,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다는 등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

하며 여권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포 게이트의 실질적 본질은 내부 권력 투쟁”이라며 “이는 곧 국정 문란과 공직 기강 와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영포 게이트’ 사건 특성상 권력 내부에서 갖가지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낱알이 밝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7·28 재보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 친목 모임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원내대표가 전면에서 나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박 대표가 ‘영포 게이트’와 관련, 새로운 사실들을 쏟아낸다면 각종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권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7·28 재보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영포회 파문까지 불거져 심난하다”며 “특히, 박 원내대표가 전면에서 나선 만큼 이번 영포회 파문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을 전망이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새 야구장 건립 시민 공청회

노후한 무등경기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의 건립은 지역문제를 넘어서 야구계의 숙원사업이다. 무등경기장은 지난 1965년 건립됐으며, 수용인원은 1만3400명으로 좌석 불균·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흡·인조잔디 설치에 따른 선수 부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시민추진위는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바람직한 야구장 건립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접근성 높여 무등경기장에 신축 문화 기반시설, 공공성 강화해야”

◇패널과 시민들의 의견은=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체육계·시민단체·기아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및 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립 방식은 광주시가 애초 추진했던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 규모는 문화·사직구장의 수용인원을 감안해 2만5000석이 적정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새야구장 부지였다. 7명의 패널 중 5명은 무등경기장을, 나머지 2명은 경제성·교통접근성·공간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경기장을 포함한 광주지역 내 다양한 부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궁극적으로 교통접근성 미흡·부지 협소 등 무등경기장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가 해결될 경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무등경기장에 신축해야한다는 주장을 펴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경욱 기아타이거즈 마케팅팀장은 “새 야구장은 개방형 천연잔디구장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경기장 주변 미니야구장 건립·경기장 내 야구박물관 시설 확충은 물론 대중교통망을 추가 구축하고 주차시설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응식 조선대 체육대 교수는 “장소성을

강한하고 북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경기장에 새 야구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문기림 기아팬클럽 회원 역시 “무등경기장의 부지가 협소하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며, 외국과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기존 도심의 공공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무등경기장의 부지 면적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광주 미래를 감안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무등경기장을 부지로 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박영만·박정식씨 등은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인근의 보호회관이나 노후 단독주택지역을 포함하면 될 것”이라며 “새 야구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

◇향후 일정은=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새 야구장 건립 타당성 여부를 발주한다. 건립방식과 규모는 사실상 결정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무등경기장과 대안 2~3곳을 놓고 교통접근성·공간활용성·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계 7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야구장 건립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A명주기자 mjna@

“국정조사로 몸통 찾아야” “재보선 이용 정략적 의도”

여야 ‘영포 게이트’ 공방 가열

여야 정치권은 6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총리실 민간 사찰 사건을 ‘영포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반격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무총리실을 향의 방문,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와 면피응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우상호 대변인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총리실까지 동원한 이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부 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민간인 사찰 실태를 낱알이 밝혀졌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고등노동비서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밝혀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총리실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내용과 수사의뢰 조치는 황당무계한 변명과 피리자르기”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머리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조사위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일을 갖고 의혹을 부풀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구태연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본색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7·14 전담대회’에 출마한 서병수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이런 것은 80년대에 있었던 일 아니냐.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선교 의원은 “공직사회의 하나회가 영포회라고 생각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4명 내일부터 소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6일 사찰활동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7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도 이르면 8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실 관계자 등도 불러 자체 진상조사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했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위와 직무권한, 분장사무,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 등 4명의 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및 이메일 등을 확보키로 했다.

/연합뉴스

모두투이

무안공항출발 전세기 상품안내

씨엠립(앙코르왓)+베트남(하롱베이) 6일 ₩ 849,000

- 출발일 : 7월 22일(목), 7월 27일(화), 8월 6일(금), 8월 11일(수)
- 위 상품은 매회 30석 한정선착순 특가상품입니다.
- 무안출발(10:00) ↔ 무안도착(08:00)

- ▶ 상품비율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2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3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4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 1인 1실(2인실)

TEL. (062) 385-3355 FAX. (062) 385-3357